멈춰서는 안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김성훈 / 중앙대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부시의 반테러 전쟁과 북한의 군사우선주의(先軍主義)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이란 1%만 있어도 전력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이는 당대 우리 사회의 몇 분 안 되는 참 지도자 강원룡 목사님이 새해 아침에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보내는 광야의 메시지이다.

최근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날로 보수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대권에만 욕심이 있지 한반도 평화와 민족 문제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을 보다 못내 쏟아낸 피에 맺힌 울부짖음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민족끼리의 갈등과 충돌을 몸소 겪으며 살아온 강목사께서, 그래서 "시민 단체들이라도 나서서 앞으로의 양대 선거에서 반평화, 반통일, 반환경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1)]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 한반도 평화의 값은?

우리 국민들 중에 한반도에 전쟁의 불길이 일어날 경우 그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몇몇이나 될까? 전국이 불바다에 휩쌓이더라도 부와 번영과 안녕을 구가할 분야가 얼마나 될지 묻고 싶지도 않고, 물어서도 아니될 사항이 바로 평화의 값이다. 짧은 기간의 걸프전 때만해도 전쟁 직접 비용이 600억 달러(74조 원)이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거의 그 만큼을 갹출하여 미국에 납부한 바 있다. 반면, 피해 당사자인 현지 주민들의 생명 손실과 재산 피해, 경제·사회·교육·문화 복지 시설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의 아프카니스탄 폭격에 그 몇 배가 투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또 얼마나 추렴을 해야할지 현재로선 아무도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02년은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부시 대통령 입으로 공언한 마당이니 테러 취약 지구에 대한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02. 1),"경실련이 만난 사람,"「월간 경실련」, 신년호.

선택적인 전쟁 확산이 불가피할 것이라 한다.

만에 하나, 지난 한 세기 민족 상잔의 산전 수전을 다 겪고 단신 월남까지 한 강원룡 목사님이 " 내가 과민 반응으로 오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기우로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90살 가까이 살아온 내 직관은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어떻든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시 정권이 맨처음 MD(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중의 하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지목했을 때부터 강목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불길한 예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뉴욕 무역센터 사건을 계기로 불화살의 방향이 아프카니스탄으로 향했지만, 그 불똥이 언제 다시 한반도로 튀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일찍이 법화경에서 예시한 ' 불난 집(火宅)의 천진난만한 아이들 '처럼, 남쪽이건 북쪽이건 지붕에 불이 붙어 언제 불덩이들이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상황하에서도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희희덕거리거나 티격태격 목전의 이해에 매달려 싸우고 있으니 강목사가 아닌 누구라도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남쪽은 남쪽대로 정권 말기 현상이 너무 일찍 다가와 온 세계가 지지하는 햇볕정책도 ' 퍼주기론 '과 상호주의론에 일격을 맞은 이후 점차 열기가 식어가는 듯하고, 모처럼 다시 만난 6차 장관급회담에서 사소한 회담 장소 문제로 등을 돌렸다. 북쪽은 북쪽대로 선군정책이다 강성대국이다 하면서 체제 강화에만 주력하고 주변 정세 변화에는 늑장대처만 하다보니 그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어 어렵사리 쌓아올린 한반도의 평화 공존 장치가 허물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 한 예가 금강산 관광사업의 퇴조이다.

남북 양측에 평화 수요 아직 남아 있어

다행한 것은 급박한 국내외 정세 변화와 남북 양측의 국내 상황이 남북 양쪽 정부로 하여금 1998년 이후 어렵사리 재구축한 화해와 평화 교류 · 협력 관계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수요(需要)를 아직도 생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쪽은 식량, 전력, 개발 문제 등의 경제 분야가, 남쪽은 이산가족 상봉, 평화 유지, 자주적 세계화 추진 등 인도주의 실천과 한반도 평화 관리 문제 등이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을 필수로 한다. 이는 남북한 양측 당국의 신년사에서도 확인된다.

현 단계에서 분명한 것은 남북 관계의 악화가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남북 관계가 악화될 경우 남쪽은 경제 위기의 가중, 북쪽은 국제적 고립화의 가속 등 둘 다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지전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형태의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남북 공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양쪽의 극우파, 극좌파가 이를 부추겨 전면전으로 치닫게 할 수

도 있다. 이때 미국 부시 행정부마저 맞장구 칠 경우에는 끝장이다. 국제 정치, 경제, 군사 동향이 긴박할수록, 남북간의 화해 · 협력이 지속되어야 상호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평화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은 보다 솔직하고 대담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양측이 평화 공존 프로세스의 기본 전제로서 ‘ 존이구동 ’(存異求同)의 원칙에 서로 동의하여야 한다. 상호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뒤로 미루고 동의한 것부터 실천하되, 일단 약속한 사항은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소한 명분론에 구애됨이 없이 끝까지 지킨다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신의 · 성실의 자세가 필요하다.

평화 공존 프로젝트에 存異求同의 원칙을

2002년 양측 정부는 최소한 6대 현안만이라도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젝트로 재다짐하고 ‘ 존이구동의 원칙 ’에 충실할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여섯 가지 현안이란 ① 인도주의 차원의 식량과 비료, 의료 지원, ②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설치, ③ 금강산 특구 지정과 육로 관광 허용, ④ 전력 지원, ⑤ 경의선 철도 복원, 그리고 ⑥ 개성공단 개발 등이다. 앞의 두 항목은 인도주의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전제 조건을 달 성질이 아니다. 더구나 등가성과 동시성을 전제로 하는 ‘ 상호주의 ’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그냥 실천하는 일만 남아 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인다. 도움이 필요한 것은 솔직히 요청하고, 줄 수 있는 것은 대담하게 주어야 한다. 나머지 네 항목은 남북한에 공히 이익이 되고 평화 증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첨예한 이견이 예상되는 군사 문제(주한미군 철수, 핵 및 MD 등)와 정치 · 사상 문제(형법, 보안법, 주적론 등)는 뒤로 미루고, 서로간에 이익이 되고 남북간 전쟁 억제에 도움이 되는 일부터 차근차근 합의 · 실천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사회주의의 철옹성 같은 중국과 러시아도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응했다. 지난 3년여 동안 북한도 느리긴 했지만 많이 변화했다. 평양을 비롯하여 북한 어느 곳을 가보아도 확연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권력체제가 안정되면 이 같은 변화는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진단된다.

평화 프로세스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

다만, 평화공존 프로세스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됐을지 모를 클린턴 정부 말기의 늑장대처 경험에서 북한이 배워야 할 교훈은 현 단계 남북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제 시간은 우리 어느 한 편에 서 있지 않다. 김정일 위원장의 현명한 국제 정세 읽기와 대담한 결심,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심이 없고 솔직 투명한 접근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